

與, 4차 재난지원금 검토... 전국민·선별 지급 '고심'

코로나 확산 가속 뎀 피해 계층·진정 뎀 전국민 지급 '투트랙' 이낙연·이재명 전국민 지급론...정 총리도 "필요시 정부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며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6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면 영업제한 업종 등 피해계층을 중점 지원해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경기 활성

화와 국민 위로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달 시작되지만, 여권에서는 최근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이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국민 지급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의미)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론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지역화폐를 통한 전 국민 보편지급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다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올해 첫 재난지원금은 좀 더 과감하게 전국민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장기적으

로 유용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총 3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이 총선 공약이었던 만큼 총선 직후 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일괄 지급됐다. 국민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이뤄졌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될 경우 1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관

계자는 "1월 중순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추경 필요성과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목목히 고동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4월 재보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다"며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긴급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의장 "국민 통합위해 개헌 필요"

신년 기자간담회... "권력구조 개선·선거제 개편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국민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질게 뻗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박 의장은 "춧불 정신에 따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며 "국민통합을 이룰 때에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장이 공개적 언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과정의 갈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갖겠다"며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설치와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작년 한 해 국회 운영에 대해 "원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세 차례 추경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 법안 통과건수와 통과율도 전진에 있었다"고 자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가 지식정보 한 곳에서 이용

與 "디지털 집현전법 2월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구축사업을 본격화했다. 당정은 6일 오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 정책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집현전' 사업 관련 예산 및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디지털 집현전'은 국민 누구나 통합플랫폼에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 정보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식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가 등이 지식정보 사회의 숙제인데, 디지털 집현전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집현전 출범) 관련 법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개별 사이트에 분산된 국가 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해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떠나는 양정철

美 연구기관 초청...대통령 최측근 권력 거리두기 첫 사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조만간 미국으로 떠난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대통령 최측근 참모가 집권 후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은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 전 원장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6일 통화에서 "총선 직후 외국의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출국하지 못했다"며 "최근 다시 그를 초청한 해외 연구기관이 있어 당분간 정책 연구활동에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연말 노영민 비서실장의 교체설이 나오면서 청와대 참모들과 친문 그룹으로부터 '등판'을 요구받았지만 계속 고사하면서

최재성 정부수석 등 다른 인사들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비서실장직 고사에 문 대통령의 '정책·경제 콘셉트 비서실장' 구상이 더해져 유영민 비서실장 카드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양 전 원장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얘기는 언론의 상상력에 서 비롯된 말도 안 되는 무머"라며 "우리 (친문) 그룹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마치 본인인 바라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말했다. 양 전 원장은 당분간 해외에 체류하며 정치권과 거리를 둘 예정이지만, '문심(文心)'으로 비치는 상징성과 친문 운동권 내 리더십으로 미뤄 대선 정국에서 역할론이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재보선 후보 본경선 '100% 여론조사'

야권 단일화 시도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 본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100% 여론조사 본경선은 확정을 지었고,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80 대 20으로 할지, 70 대 30으로 할지만 아직 못 정했다"며 "조만간 모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 과제"라며 "단일화 이외의 방식을 쫓는다면 국민 뜻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관위가 앞선 경선준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경선률을 변경한 것은 '문호 개방' 차원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 높은 당 밖의 주자들이 부담 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되 국민의힘 스스로 야권 후보 단일화 플랫폼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 공관위원은 "일단은 외부 인사 영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안 대표 등에게 우리 당 경선에 들어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봐도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공관위 활동과 별개로 물밑에서 야권 단일화 시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3월 17일이 후보 등록이니까 그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된다"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단일화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 대세론'을 바탕으로 한 야권 단일화 프레임에 경계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많다. 안 대표의 입당 없이 '꽃기마'만 태워주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내년 대선 일정까지 고려할 때 제1 야당 후보 자리를 외부 인사에 쉽사리 내줄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안 대표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후보로 나서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우리는 3자 구도로 가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동구 대인동, 싹 빵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가능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든가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